

광복절 특사 안할 듯

박범계 법무부장관, 민생·전직 대통령 사면에 선 그어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부족·통합 효과 적다고 판단한 듯 임기 5년동안 단 한차례도 특사 단행 안한 대통령 기록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공감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17년부터 임기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일포인트(사면)도 쉽지 않는데, 민생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그 기준 세우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물리적 이유를 들어 특사불가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위과 민생"이라며 "두 가지 차원에서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전직 두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청와대도 광

복절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면을 위해서는 두달 정도 전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추리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광복절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정부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 통합' 효과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준근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과 '국민 통합'을 사면의 두 가

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자체에 선을 그은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사면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개입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내년 3월 직후에 사면을 단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임기 5년 간 광복절 특사 '0명'이란 기록을 남긴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총 3차례, 박근혜 정부는 총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 없이 2018년 신년특사(2017년 12월30일자 단행), 2019년 3·1절 특사(2019년 2월 28일자 단행), 2020년 신년 특사(2019년 12월31일자 단행), 2021년 신년 특사(2020년 12월31일자 단행) 등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오르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과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먼저 띄우고, 국민 여론 또한 이 부회장의 사면에 호의적이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은 가석방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된다. /뉴스1

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신중하게 협의하라”

서욱 국방부장관 “코로나 등 현실적 여건 감안해 美와 협의중”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날 16일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여러가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군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단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 훈련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한미 연합훈련”도 포함되는 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이라고 답했다. 이어 “필요시 한·미군 매뉴얼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상응조치를 할

의향을 표출했다”고 밝힌 것 관련, 청와대 내 훈련 중단에 대한 기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2일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국방 현안 보고에서는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뉴스1



민주당 대권주자 본경선 2차 TV 토론회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양동 YTN에서 열린 본경선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 선관위, 경기도 유관기관 선거운동 제재해야”

이낙연측 “경기도가 교통연수원 출자금 62%, 예산 84% 부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4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의 SNS 활동이 문제였다는 판단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 선관위의 결정은 공무로만 아니라면 비방과 흑색선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로부터 8억8000여만원의 출자금을 받았고, 이는 출자금 전체의 62.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정부 지분 50% 이상인 기관은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지만, 경기도 지분이 50%가

넘는 기관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2020년 예산 총 43억9000만원 중 경기도 예산이 무려 37억4000만원으로 84%에 달한다”며 “경기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연봉 8800만원을 받는 자가 이낙연 후보를 ‘친일, 기레기로 공격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 8항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중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이 조항의 취지는 민간 단체임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 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어떤 마타도어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를 해야 마땅한 것”이라며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선관위가 경선 과열을 방지하고 혼탁하게 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당 선관위는 진씨가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즉각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진씨의 SNS 활동 관련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검찰에 수사지료를 통보했다. 고발을 접수한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현재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뉴스1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 오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출범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임명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겸해 열린다.

임 부대변인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이 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토대로 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가 계획되었다. 이후에는 민간 위원, 국내 기업 대표 관계장·차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추진위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차관 청와대 사회수석과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추진위 민간위원 12명과 백신 생산 국내 기업 대표들이 자리한다. /뉴스1

“검증 부실, 피해자는 국민”

정세균 전 총리 “국민 납득 수준까지 가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일 대선 후보 간 검증 공방에 대해 “검증이 부실하면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제대로 검증이 안 돼 나중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검증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검증과 네거티브를 잘 구분해야 한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흠집내기하는 건 네거티브고 국민들께서 아시고 싶어 하는 내용, 의혹이 있는 부분을 따지는 건 검증”이라며 “경선이라는 건 가장 흠이 없는 후보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당내 후보 검증단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기초의원, 광역 단체장은 모두 당에서 검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증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검증단을) 제안했더니 당에서는 말이 없고 오히려 야당에서 검증단을 구성했다. (검증단) 구성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 경선 2차 TV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본

인 공약 이행률이 최고라고 했는데 셀 프 채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라며 “부풀리기 식이거나 자화자찬 형식이라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1

민주당 ‘최재형 정치 이직’

헌법정신 저버린 부정한 출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와 법도를 내팽개친 최 예비후보의 정치 이직은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선 출마선언을 한 최 전 원장은 법치 원칙,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사임한지 17일 만에 국민의 힘에 입당하고 32일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야당 경선 버스를 놓칠까 조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며 “정치 지망생의 출마선언은 철 지난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처럼 비정당적은 비방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진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